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 2023. 4. 14.(금) 10:00, 정부서울청사 -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에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1만 3천 여명에 달합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입니다. 특히,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자살시도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중 약 36%나 되는 분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 전체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5년간 국민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등을 논의·확정합니다.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국민 정신건강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합니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에 맞춰 2년 주기로 단축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층으로 시작해서 전 연령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철저히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둘째, 자살 위험군에 대한 발굴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어쩔 수 없이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 전달체계와 금융·신용 상담 정보를 자살예방서비스와 연계하여, 경제적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와, 연예인과 같은 특수직군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자살 유족과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현재 9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찰·소방·병원이 보유한 자살시도자와 유족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빠짐없이 상담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합니다. 자살 위험군과 접점이 많은 사회복지사, 교사, 소방관, 경찰 등에게 생명존중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하고 자살급증 지역에 대한 경고체제도 구축하여, 자살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자살예방 정책의 시작점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국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임을 잊지 말고 자살 예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